

# '도돌이표' 선거제 개혁 논의

### 의원정수 확대 놓고 3야 '불가피' vs 민주·한국당 '반대' 민주 '지역구 줄여 비례대표 확대' 제안에 한국당 '불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제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내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의 15일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쪽(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과,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는 쪽(민주당)이 팽팽히 맞섰다. 여기에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 당론을 확인하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민주당 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1소위원장인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면 일종의 대선거구 의미가 있어서, 줄여도 지역구 후보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기회가 생긴다"며 "현재 단일인 비례대표제도 재선, 3선이 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모든 나라가 지역구를 줄인 만큼 비례대표를 늘려서 선거제를 개혁했다"며 지역구 의석 축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

구를 줄이면 농촌 등에서는 '슈퍼 슈퍼 선거구'가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개혁위에서 민주당안대로 지역구 28석을 줄인다고 결단해도 본회의장 가면 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공방이 지속되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1소위원장인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1소위원장인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1소위원장인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5배에 해당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비용 조달을 위한 계파정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한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던)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내에 파벌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단점이 많다는 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무조건 커진다고 해서 선거비용 늘어난다는 의견에는 문제가 있다"며 "파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오래된 정치문화에 대입시켜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재차 밝혀

### 송영길 "탈원전엔 동의"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15일 다시 한 번 개진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미세먼지 저감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를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발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설명하며 당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화력발전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장장기 에너지 믹스



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청와대 전날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야당은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저는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해 공론화해보자는 총정의로 국회의원으로 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방위 與 불참에 파행

### 軍 인사자료 분실 놓고 공방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요구로 15일 청와대 전 행정관의 군 인사자료 분실 사건을 현안으로 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회의는 파행했다. 여야 간사의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은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고, 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1시간 가까이 이어지다 회의는 끝났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회의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군 불법 인사농단 의혹에 군인들이 부끄럽고 있다"며 "공명정대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상임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는 데 반대한다"면서도 "다만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나서서 해소해주는 것이 대의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 인사철만 되면 민감한 상황이 조성돼 오죽하면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시끄럽다고들 한다"며 "육군본부 인사 추천권 행사가 외압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소집돼 유감"이라며 "특히 이 문제는 국방위보다 운영위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곧 발표"

### 금투협 방문... 이해찬 대표 "금융업계, 모험적 투자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700조원에서 1천조원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많지만, 대개 용자가 담보대출이나 직접투자 비중은 적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 유동자금을 실제 투자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

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금융업계의) 투자 관행은 주로 안전한 대출 위주였는데 그렇기만 해서 한계가 있어 조금 더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엔젤클럽'에서는 12개 중 1개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투자 관행이 있다. 이런 것 (엔젤투자)을 활성화해야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정책위의장도 "풍부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획기적 대책을 조만간 집대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대표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7개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증권사 사장들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인하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 체계의 선진화를 민주당 지도부에 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정부 모든 공무원 적폐몰이 안돼"

###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 기자회견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5일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 국정 전반에 농단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당 배경에 대해서는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는 제 생각과 당의 생각을 함께하기 위해 입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월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을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은 시사했다. 특히 황 전 총리는 이날 '친박(친박근혜)'이란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기자들의 질문과 지적에 대해서는 '계파 극복' '소통' '국민통합'

'부족한 점 보완' 등의 답변을 하며 직답을 피해갔다.

한편, 황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주요 정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라며 "국정농단에 대한 큰 책임이 있고 본인도 의혹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사죄와 반성 한마디 없이 마치 개신장군처럼 정치 하겠다고 나서고 당권 주자로 주목 받고 있다"며 "보수혁신과 개혁을 약속한 한국당의 선택은 결국 '도로 친박'으로, 한국보수의 쓸쓸한 현주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박근혜정부 가장 상징적 인물로, 국정농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에 나서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당식에서 국정농단-탄핵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현 정권만 공격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제 한국당은 '박근혜당', '원조 국정농단 정당', '탄핵정당', '친박정당'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 본 투자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슈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 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